

제237호 (2009. 12. 14)

■ 경제 동향

- 전국 미분양주택 7개월 연속 감소

■ 정책·경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의 파급 효과와 추진 방향
- 국내 건설산업 인건비·생산성 모두 양호

■ 정보 마당

- 건설 이노베이션의 주력 분야는 자재·장비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교통 SOC 예산 축소 신중해야”

전국 미분양주택 7개월 연속 감소

- 준공후 미분양은 증가, 전체 미분양 물량 12만호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 10월 미분양주택 수 전월 대비 6천호 감소

- 올 10월 말까지의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줄어든 12만 437호로, 전월 대비 4.7%(5,987호), 전년 동월 대비 22.7%(3만 5,283호) 감소함.
- 시도별로는 경기(1만 6,638호)가 13.8%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1만 6,467호), 충남(1만 3,656호), 경북(1만 2,678호) 순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은 전월 대비 0.4%(2호), 민간 부문은 4.8%(5,985호) 감소함.
- 규모별로는 전월 대비 모든 크기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소형 규모(85㎡ 이하)의 감소가 두드러짐. 대형(85㎡ 초과)은 여전히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10월 말 현재)>

(단위 : 호, %)

구분	2008.10	2009.9	2009.10		전월비		전년 동월비	
			주택수	비중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합계	155,720	126,424	120,437	100.0	-5,987	-4.7	-35,283	-22.7
수도권	25,262	20,962	19,848	16.5	-1,114	-5.3	-5,414	-21.4
지방	130,458	105,462	100,589	83.5	-4,873	-4.6	-29,869	-22.9
민간부문	154,886	125,957	119,972	99.6	-5,985	-4.8	-34,914	-22.5
공공부문	834	467	465	0.4	-2	-0.4	-369	-44.2
60㎡이하	6,963	4,895	4,425	3.7	-470	-9.6	-2,538	-36.4
60~85㎡	62,091	48,718	44,972	37.3	-3,746	-7.7	-17,119	-27.6
85㎡초과	86,666	72,811	71,040	59.0	-1,771	-2.4	-15,626	-18.0

자료 : 국토해양부.

■ 준공후 미분양주택 수, 증가세로 전환

- 5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준공후 미분양주택 수는 10월 들어 전월 대비 1.8%, 870호가 늘어났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9%, 9,055호가 증가함.
- 부산(-331호), 광주(-318호), 강원(-267호)은 300호 내외의 감소를 보였으나, 대구(960호), 경남(888호) 지역에서는 1천호 가량 증가함.
- 부산, 광주, 강원 등 감소 지역은 적극적인 할인판매 전략과 전세 전환, 일부 업체의 부도, 자체적인 수급 조절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증가 지역인 대구는 달서구와 동구, 경남은 양산시에서의 입주물량 증가에 기인함.
- 지역별로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94.5%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민간 부문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1호에 불과
- 규모별로는 85㎡ 초과는 전월 대비 5.9%, 1,255호가 증가하였으며, 60㎡ 이하 및 60~85㎡는 소폭 감소함.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10월 말 현재)〉

(단위 : 호, %)

구분	2008.10	2009.9	2009.10		전월비		전년 동월비	
			주택수	비중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합계	39,464	47,649	48,519	100.0	870	1.8	9,055	22.9
수도권	1,174	2,645	2,690	5.5	45	1.7	1,516	129.1
지방	38,290	45,004	45,829	94.5	825	1.8	7,539	19.7
민간 부문	38,787	47,636	48,508	100.0	872	1.8	9,721	25.1
공공 부문	677	13	11	0.0	-2	-15.4	-666	-98.4
60㎡이하	4,712	3,949	3,575	7.4	-374	-9.5	-1,137	-24.1
60~85㎡	20,963	22,540	22,529	46.4	-11	0.0	1,566	7.5
85㎡ 초과	13,789	21,160	22,415	46.2	1,255	5.9	8,626	62.6

자료 : 국토해양부.

■ 미분양 물량 여전히 심각한 수준, 합리적인 판매전략 도모해야

- 미분양 주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12만호(준공후 4.9만호) 이상의 많은 물량이 적체되어 있음.
 - 미분양 주택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9.6조원(준공후 미분양주택 11.9조원, 추정치)인데, 건설업체의 자금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묶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 주택 금액 추정치 = 미분양 주택수(or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 × 평균주택가격(국민은행)

- 여전히 많은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미분양 양도세 감면 조치 종료(2010년 2월 11일 종료)와 기업대출 만기 연장 조치의 급속한 정상화는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큼.
 - 건설업체는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의 주택 구입 성향이 과거보다 더욱 신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판매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의 파급 효과와 추진 방향

- 입찰자가 사용 자재와 공법 선택 가능, 회사내 적산 및 견적 기능 강화해야 -

■ 물량내역서 수정 방식 허용 → 건설업체 및 발주자 부담 모두 증가

- 정부에서는 현행 내역입찰제 하에서는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나 효과적인 시공법 등에 대한 검토 없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물량 내역을 뽑고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 나아가 ‘순수내역입찰’과 유사한 형태로서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을 참고로 교부하지만, 수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역서 수정 방식’도 도입 예정임.
 -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발주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에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그 이후 점차 확대하여 2012년에는 3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예정임.
- 순수내역입찰제와 내역서 수정방식이 허용되면, 물량내역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전환됨.
 -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입찰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을 그대로 제출하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정부에서는 저가심의시 단가 인하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물량 절감 위주로 평가할 경우, 물량 내역의 수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입찰 참가자수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 물량내역서 작성과 관련된 적산·견적 업무가 증가되면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증가시켜 해당 공사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입찰 참가자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발주자 측에서도 입찰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잘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물량을 정확히 산출했는지, 혹은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시공법을 적용하였는지, 제출 단가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현재 조달청 보유 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발주처에서 물량 내역서 등을 직접 심의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순수내역입찰제에서는 사용자재와 시공법의 선택 권한이 입찰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입찰 가격을 낮추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물량 산정의 오류나 부적절한 원가 산정에 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사내 적산 및 견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순수내역입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량내역서(BOQ : Bill Of Quantities)의 작성이 가능한 다수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견적사 혹은 적산사(Quantity Surveyor) 자격증을 신설,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내역 수정 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자에게 책임 부여해야

- 국내의 현실을 살펴보면, 순수내역입찰제의 적용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와 연계하여 단순히 입찰 참여자를 제한하거나 혹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순수내역입찰이 도입되어서는 곤란함.
- ‘물량내역서 수정 방식’에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자료로 취급하고, 입찰자가 검토하여 수정 제출한 물량내역서를 계약서류로 하여 입찰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간 공정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발주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시공업체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음.
- 발주자와 입찰자 모두 대등한 계약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설계도서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입찰자가 내역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물량 산정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찰자간 기술경쟁을 촉진하면서 입찰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공종에 전면적으로 순수내역입찰을 도입하지 않고,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이 용이하고 건설 공사의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공사(temporary works)에 국한하여 순수내역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국내 건설산업 인건비·생산성, 소득수준 대비 양호

- 개도국과의 인건비 경쟁에서 벗어나, 소득수준에 맞는 새로운 경쟁역량 필요 -

■ 국내 건설산업 인건비·생산성, 동일 소득 수준 국가 대비 양호

- 건설공사비 산정 전문기관인 COMPASS사의 자료분석 결과, 국내 건설인력의 생산성과 인건비는 동일 소득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인당GDP '20,000달러 이상~30,000달러 미만' 그룹*에 속해 있으며, 국내 건설인력의 생산성 및 인건비는 속한 그룹의 평균보다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술자, 숙련기능인력 및 일반기능인력의 인건비는 속해 있는 그룹의 평균 인건비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평균 인건비와의 차이가 커, 향후 숙련기능인력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됨.
 - 국내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생산성은 해당 그룹의 평균보다 좋게 나타남. 사용된 생산성지수는 동일한 업무량에 투입되는 인력량, 혹은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좋을수록 생산성지수는 작아짐.**

■ 저임금 앞세운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 심화

- 국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설인력의 생산성과 인건비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터키,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의 인건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기업들은 인건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매년 세계 건설기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ENR*지(Engineering News-Records)에 따르면 1998년 국내 건설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0%에서 2008년 2.9%로 하락하였고, 국가 순위는 1998년 9위에서 2008년 11위로 하락하였음.
- 현재 국내 건설산업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는 국가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COMPASS 보고서에서는 2009년 우리나라 1인당GDP를 24,370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발표 값과는 차이가 있음.

** 생산성지수 '1.0'은 임의 업무를 소화하는데 투입되는 1인의 인력(혹은 단위 시간)을 의미함. 생산성지수가 1.0보다 큰 경우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1인보다 더 많은 인력(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과거와 같이 인건비 위주의 생산기술 시장에서 개발도상국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인건비는 양호한 편임. 그러나, 중국, 터키 등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 국내 인건비는 높게 체감되고 있음.

〈국민소득 그룹별 인건비 및 생산성 지수〉

소득수준 1인당GDP(US\$)	분석 국가수	1인당GDP 평균지수	인건비지수			생산성지수	
			기술자	숙련기능인력	일반기능인력	기술인력	기능인력
Korea ¹⁾	-	1.00	1.00	1.00	1.00	1.00	1.00
5,000미만	25	0.10	0.35	0.46	0.37	1.26	1.92
5,000이상 ~ 10,000미만	16	0.30	0.50	0.62	0.54	1.21	1.42
10,000이상 ~ 20,000미만	17	0.59	0.82	1.23	0.93	1.16	1.28
20,000이상 ~ 30,000미만	9	0.98	1.10	1.55	1.22	1.14	1.31
30,000이상 ~ 40,000미만	16	1.50	2.23	3.56	3.25	1.01	1.03
40,000이상	6	1.96	2.45	4.75	4.48	0.98	0.99

주 : 1)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인당GDP, 생산성, 인건비는 우리나라를 기준(1.0)으로 지수화 함.
자료 : Compass International Consultant Inc., 'The 2009 Global Construction Cost and Reference Yearbook' 분석 자료

■ 저가 인건비에서 탈피한 새로운 경쟁 역량 확보 필요

- 생산기술 중심에서 관리기술 중심 시장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중국 및 터키 건설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건설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으나,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건설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
 -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생산기술 중심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 건설기업들은 관리 중심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저가의 인건비가 아닌 건설인력의 새로운 경쟁 역량 확보 필요
 - 세계 건설시장은 이미 저가의 인건비로는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따라서, 인건비 상승을 제한하기보다 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인력의 질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성유경(연구원-sungyk@cerik.re.kr)

건설 이노베이션의 주력 분야는 자재·장비

- 건설 R&D 투자 및 산업간 융복합 분야에 주목할 필요-

■ 건설업 이노베이션의 중추는 자재·장비 등 공급 부문

- 지난 1세기 동안 유럽에서 이루어진 건설 분야 이노베이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시공 영역보다는 자재 및 장비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
 - 전체 이노베이션의 약 65%는 자재·장비 등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고, 특히 제품 이노베이션 중에서는 약 80% 차지
 - 전체 건설 이노베이션의 약 20%는 화학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건설업체가 전체 이노베이션의 10.9%를, 설계·용역업체가 8.8%를 점유하고 있음. 건설업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주로 공정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관련 주체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생산 주체로 자재 생산업체라는 응답이 69.9%였고, 건설업체는 9.3%로 나타났음.

〈건설 이노베이션 주체 및 분야〉

(단위 : %)

구분	공정 개선	제품 개선	전체
건설 업체	18.2	3.4	10.9
공급 업체	50.9	78.4	64.6
설계·용역	10.7	7.2	8.8
기타	20.1	11.1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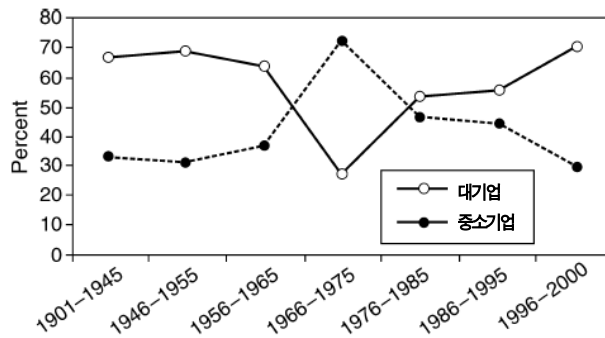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 큰 비중 점유

- 이노베이션 주체를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 기간 동안 평균 약 60%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중소기업은 대체로 공정 이노베이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제품 이노베이션에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 특성상 시공 과정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 Pries F. and Dorfle A., "A century of innovation in the Dutch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005. 7.

** Dale, J., "Innovation in Construction Ideas are the currency of the future", 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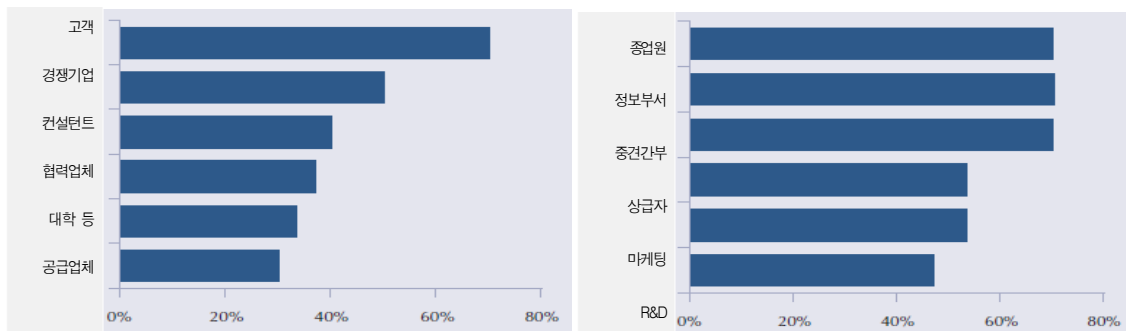
〈기업 규모별 이노베이션 비중〉



■ 건설업체, 고객·종업원 등으로부터 중요 이노베이션 정보 입수

- 이노베이션 관련 정보는 주로 고객 및 종업원 등을 통해 얻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노베이션의 주요 외부 정보원을 묻는 조사*에서 고객이라는 답변이 약 70%, 경쟁기업 약 50%, 컨설턴트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내부 정보원으로는 종업원·정보부서·중견 간부 등이 서로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

〈건설업체의 대내외 이노베이션 정보원〉



■ 고객과 종업원 의견 경청 필요, 산업간 융합·복합 R&D 활동도 강화해야

- 혁신의 주된 아이디어는 고객 불만과 종업원의 사소한 아이디어로부터 나오에 유념
 - 일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서 혁신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
- 한국의 건설 R&D 투자는 공정개선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자재·에너지 등 관련 산업과의 융합·복합 기술개발을 강화할 필요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PricewaterhouseCoopers, "Innovation in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ACIF, 2002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7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최 ‘건설근로자 기능교육 평가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기능인력의 기능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심의위원으로 참여
12.8	토지주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경기전망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2010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전문가 자문
12.9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금융감독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 관련 전문가 자문(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자문)
12.1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준과 주최, 환경관리비 토론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구성 체계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규제개혁 자문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2009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성과 설명 - 지자체 건의규제 중 주요 불수용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토론

■ ‘중소건설업 해외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 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12.15(화) 15: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 건설업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주제 발표 :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
- 사례 발표 : 라오스 건설시장 진출 사례(갑을건설), 캄보디아 건설시장 진출 사례 발표 (한일건설), 카자흐스탄 건설시장 진출 사례(동일토건) 등

■ ‘제4회 건설보증연구포럼’ 개최

- 연구원이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건설보증연구포럼’ 제4차 회의를 12.17(목) 16:00,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
- 이번 포럼에서는 ‘2010년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에 대해 연구원에서 발표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보증시장의 변화방향과 대응방안 및 2010년 보증 관련 연구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

“교통 SOC 예산 축소 신중해야”

전국 어디에서도 도로나 철도 건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들 공사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해 언제 끝나는 공사인지 알 수가 없다.

공공건설사업 공기지연 초래

감사원은 일반국도의 공사기간이 당초 7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되고 광역철도도 당초 계획보다 최소 4년에서 최장 19년 지연될 것으로 보았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361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도로·교량 공사는 당초 공기 대비 7.6년, 철도는 8.7년, 항만은 2.6년 연장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기 연장은 공사구간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개통 지연으로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투입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며 시설물의 노후화를 유발한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5% 증가했다. 그 중 외교·통일, 연구개발(R&D), 보건·복지 분야는 각각 14.7%, 10.5%, 8.6% 상승했지만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도 0.3%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교통시설 SOC 예산은 17.1%가 감소했다. 교통시설 SOC 예산 축소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공공건설사업의 공기 지연이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의 적정공사비는 현장당 연간 1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도 일반국도 사업은 138개로 현재 예산(안) 수준에서는 현장당 평균 52억원의 공사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당 52억원의 수준으로는 공기 지연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작년과 올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SOC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SOC 투자는 단기적 경기부양대책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장기비전 하에 적정 수준의 투자를...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본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 막대한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SOC 투자에 따른 효과는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고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실현된다. 교통 SOC 투자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를 반복하기보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적정의 투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경제, 2009. 11. 25>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